

# 하청기업 선정 때 안전성 “외면”

## 주요 상장기업 중 안전성 평가 6% 불과 ... 관행 개선 필요

3월 초 대림산업의 화학공장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국내기업들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상장기업 가운데 약 6%만이 하청기업을 선정할 때 안전보건상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기업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워낙 소수이지만, 그마저도 산업재해 은폐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기준이 평가에 도입되면 원청기업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하청기업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하청기업의 안전보건 관련교육을 지원하는 곳은 분석대상 중 OCI,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대림산업,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 한라공조, 한전KPS, 삼성전기 등 9사에 그쳤다.

그나마 원청기업의 지원형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국내 원청기업의 지원은 작업장 순회점검이나 작업 안전시설 지원 정도에 그친다”며 “일부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도 서류에 교육을 받았다고 서명하면 그만인 형식적인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원청업체가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안전교육이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도 산업재해 발생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하청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려면, 하청기업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 마련과 관련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줄이려면 5단계가 필요하다”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조직 시스템 내재화,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반영의 순환구조를 제시했다.

이어 “원청기업인 대기업이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내부적 규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사망사고 위험이 큰 작업장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부문의 재해예방에 행정역량을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기업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에 대해 투자자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영재 대표는 “영국 BP(British Petroleum)는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시가총액의 40% 가량이 증발할 만큼 투자자의 반발이 거셌다”면서 “국내 투자자는 해외만큼 기업의 안전 리스크 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27>